

해외입양의 불법성과 국가책임

소라미(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

(1) 유엔아동권리협약

- 입양과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제21조)
 - 입양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 권한 있는 관계 당국이 입양을 결정할 것
 - 해외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
 - 해외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익 취득 금지
- 출생등록될 권리, 성명권 및 국적취득권, 정체성을 알 권리(제7조)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2021헌마975결정)
 - 고아호적 해외입양 관행으로 중대한 기본권 침해 발생

1.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

(2)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배경

- 1993년 유엔 정기총회에서 채택, 1960년대 후반 이후 해외입양의 급증에 따라 아동 인권침해 문제 대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2013. 5. 24. 서명, 국회 비준 x

●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

-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 받을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
- 해외입양 아동의 99%가 미혼모 가정 출신인 우리 사회의 실태

1.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

-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 의한 해외입양 관장

- 아동의 입양적격 심사, 아동 보호 조치, 입양 동의를 위한 설명, 아동의 동의 의사 확인, 양부모의 적격 심사, 양부모에 대한 상담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이 담당할 것
- 입양허가에 대한 법원의 개입 이외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 입양 절차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 배경

- 2009년 12월 18일, 원가정보호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유엔총회에서 결의
- 아동은 근본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개입할 것

1.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

(3)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함(제13항)
- 물리적인 가난이 아동을 부모의 양육에서 분리하거나 재결합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난은 해당 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할 것(제14항)
- 국가는 가족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고,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제31항)
- 국가는 아동유기, 친권포기, 가족과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제33항)
- 혼외 자녀임을 불문하고 한부모와 미성년자 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과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진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제35항)

1.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

(4) 국가간 불법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

- 배경

- 2022. 9. 2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아동성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에서 불법입양에 관한 성명 발표

- 불법적인 해외입양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해외입양의 보충성
- 해외입양과 관련한 재정적 이득 금지
- 관할 당국에 의한 해외입양의 허가

1.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

(4) 국가간 불법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

- 불법입양에 대한 국가의 구제 의무
 - 불법입양 피해자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 (right to origine) 보장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

2.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 정책

(1)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혼혈'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입양 추진
 -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 '혼혈'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대신之父의 나라인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는 정책 추진
 - 1954. 1월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하도록 조치" 할 것을 직접 지시(신필식, 2020:50)
 - 한국아동양호회 설치하여 해외입양 주선 추진
- 해외입양에서 '혼혈'아동이 차지한 비중
 - 1955년 88.1%, 1956년 92.1%, 1957년 84.6%
 - 1960년대 전 후경 50% 내외로 감소

2.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 정책

(2)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
 - 해외입양의 간이화와 촉진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제1조)
 - 대리입양의 근거 규정 명시: “외국인은 각 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 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 해외입양 대상 아동인 ‘고아’의 정의를 확대 규정: 실제 부모가 없는 아동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로부터 입양의 동의를 받은 아동까지 고아로 포괄
 - 입양부모를 검증하는 절차 규정 無
 - 기아나 미아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최소한의 보호정책 규정도 無

2.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 정책

(2)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입양대상 아동 중 미혼모 자녀 비율 증가

- 1960년대 17.9%, 1970년대 36.5%, 1980년대 72.2%, 1990년대 92.5% (조가은, 2019: 34)

- 해외입양의 중단과 재개

- 1970. 12. 1. 북한의 역선전으로 국위 선양에 저해된다는 판단 하에 스웨덴과 인접 6개 중립국에 대한 해외입양 중단
- 1971. 3. 2. 입양 중단 해제
- 1974. 11. 29. 북한공관 주재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다시 입양 중단
- 1975. 10. 10. 입양 중단 해제
- 1976년 국내입양 수에 비례하여 해외입양 수를 배당하는 쿼터제 도입, 매년 국내입양을 10%씩 늘려 1985년 해외입양 중단하겠다는 계획 => 선언으로 그침

2.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 정책

(3) 전두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해외입양 전면 개방

-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 명분을 내세워 해외입양 촉진 및 전면 개방
- 1982. 1. 20. 보건사회부는 4대 해외입양 기관장이 출석한 입양알선기관장 회의를 주재하여 입양할당제를 폐지하고 해외입양 사업 자율화 추진 고지(*국가기록원 자료 참고)

- 해외입양 통계 최고 수치 기록

- 1980년대 10년간 6만 5천⁵¹¹명의 아동이 해외입양
- 1985년과 1986년 최고 기록: 한 해 평균 8천명의 아동이 해외입양, 그 중 6천명의 아동이 미국행
- 1986년 기준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 중 한국 출신 아동이 차지한 비율은 약 59%
- 해외입양기관 간 입양아동 모집을 위한 경쟁 조장,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친권 포기 유인, 부모가 존재하는 아동을 기아나 미아로 만드는 부작용 야기(신필식, 2020:254)

<국가기록원의 입양사업지침(1978-1988) 중 1982. 1. 20. 자. 입양알선기관장회의결과>

- 일시: 1982. 1. 20. 14:00
- 장소: 가정복지국장실
- 의제: 국외입양개방에 따른 문제
- 참석자
 -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장
 - 보건사회부 아동과장
 - 홀트아동복지회장
 - 동방아동복지회장
 - 한국사회봉사회장
 - 한국사회봉사회 이사장
 - 대한사회복지회장

국 장

1. 국외입양사업은 기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개방하며
활동제는 폐지한다.
2. 국내입양 우선원칙에는 변함 없다.
3. 개방이 많은 인원을 내보내자는 뜻은 아니다.
4.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한다.
5.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는 모임입니다.

김

목표는 81년과 대동소이할 것이며 81년도는 80년도 어원인원이
있어 무난했으나 금년에는 목표를 높일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

박

양식에 따라 운영 합니다. 금년은 대개
동방아동복지회 1,150 홀트아동복지회 2,500
한국사회봉사회 650 대한사회복지회 95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

1. 능력에 맞게 계획했으니 그대로 추진하고 스스로 자제
합니다.
2. intake에 문제가 있으니 기존영역을 준수하여 마찰을
피합니다.

국 장

1. 현 입양수준은 기아발생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능한
보내도록 한다
2. 외국기관과의 2중 협약은 피하고 지역확대가 바람직함.
3. 수수료에 대하여 인신매매, 폭력인상등 불의방지가 필요함.
4. 정부가 수수료를 승인하는 형식을 피하여 좋다.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1) '기아호적' 창설을 통한 무분별한 해외입양 추진

● 내용

- 친생부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입양대상 아동을 무분별하게 고아로 신고하여 기아호적으로 해외입양 추진

- 신속 간이한 해외입양 추진 목적

● 피해 사례

- 길을 잃은 아동의 가족찾기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보낸 사례

- 친생부모가 존재 함에도 입양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진행한 사례: 병원 입원 중 병원 의뢰로 해외입양 진행,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조부모의 의뢰로 해외입양 진행

-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 후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입양이 추진된 사례

- 친생부모에게 직접 입양동의를 받았음에도 기아호적을 창설하여 해외입양 추진한 사례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1) '기아호적' 창설을 통한 무분별한 해외입양 추진

● 2022년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터뷰 내용 중

- “우리는 분명히 고아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고아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중개를 해줘서 받아냈어요. 엄마가 실제로 우리를 비행기에 태웠어요” (109쪽)
- “친생모는 난산이라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했었고, 친생부가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중략) 병원에서 친생가족에게 내가 출생 당시 사망했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통보했어요. 허위가 만들어진 거죠. (중략)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찾았는데 (중략) 내 친생부는 어리둥절했어요. 애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중략)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삼 십 년 이상 전해져 내려왔는데” (110쪽)
- “입양 보내려고 나를 넘긴 사람이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었다는 것예요. 내 외할머니가 부모님 동의도 없이 나를 입양기관에 데려갔어요.” (116쪽)
- “친생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돈 버는 동안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겼고, 어머니는 친정에 가 있었는데 (중략) 친할머니가 나를 입양기관에 넘겼고 어머니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다고 했을 때 입양 보냈다고 했대요.” (118쪽)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2) 다른 아동의 신분으로 입양; 입양기록의 조작

- 내용

- 입양아동 본인의 신분이 아니라 다른 아동의 신원으로 대체되어 해외입양이 진행되거나 입양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례

- 피해 사례

- 입양기관을 통해 확인한 입양기록을 토대로 가족을 찾아 4년간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 다른 아동의 신분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
- 입양기관에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 절차를 위해 입양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는 사실을 안내 받은 사례
- 입양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다른 아동의 신원으로 해외입양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44년간 본인이 아닌 다른 아동의 이름과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살아옴
- 가족찾기 과정에서 입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양기록이 본인 것이 아니라 본인 전에 입양이 결정되었던 다른 아동의 기록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2) 다른 아동의 신분으로 입양; 입양기록의 조작

● 2022년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터뷰 내용 중

-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입양될 거라고 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이름은 000인데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내 생일이랑 가족 이야기도 다 바꿨어요.” (119쪽)
- “새 이름이랑 생일을 줬고, 나는 그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시설장)이 완전히 바꿔 버리길 원하는 거고, 내 정체성을 없애 버린 거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한 거죠.” (112쪽)
- “내 권리가 보호되었는지에 대해서 0점을 주겠어요.(중략) 나를 다른 아이 서류랑 바꿔치기했거든요. (중략) 시설장은 알고 있었고 거기서 바꿔치기한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 이름으로 입양 간다는 걸 당시 입양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112쪽)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3) 아동학대 피해 등 사후관리의 부재

● 내용

- 입양 전 한국의 양육시설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례:구타 등 폭력(시설종사자 또는 다른 시설 아동에 의한), 비위생적인 환경, 부족한 음식 제공 등
- 2022년 해외입양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658명 중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 경험한 입양인 33.5%, 수령국의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76.3%가, 한국 입양기관의 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85.1%가 부정적인 답변

● 피해 사례

- 현지법상 금지 되어 있는 한부모 입양이 성사됨
- 양부에 의한 성적 학대 피해, 양모는 방관 및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
- 양모(정서적 불안정, 알코올 중독 등)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 피해 사례 등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3) 아동학대 피해 등 사후관리의 부재

● 2022년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터뷰 내용 중

- “맞기도 하고 욕도 듣고 (중략) 도착했을 때 여섯 살이었는데 양어머니가 나한테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할 때마다 나를 때렸어요. 억지로 영어를 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은 것이 상기가 되니까요.” (124쪽)
- “양엄마가 심리적 문제가 많았는데 (중략) 나를 가둬놓고 감옥의 죄수처럼 다뤘어요. 지하의 화장실에 나를 가두곤 했어요. 나는 칠흙 같이 캄캄한 곳에 앉아서 이틀 정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려야 했고 이후엔 나를 내방에 가뒀어요.” (125쪽)
- “두번째 입양된 가정에서 입양부가 이차 성징 직전까지 매일 밤 성추행 했어요. 입양모는 신체적으로 학대했지요.” (125쪽)
- “나는 네살이었지요.(중략) 무력하고 두렵고, 이게 첫번째 생생한 기억 중 하나예요. 네, 그러고는 별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지, 주먹으로 때린다는지, (중략) 여섯 살도 안되었을 때인데, (중략) 물건을 나한테 던진다는지, 집에 총이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쏘는 건 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124쪽)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4) 수령국의 시민권 미취득 피해

● 내용

- 미국의 경우 입양성립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한 별도 행정절차 진행 필요(유럽의 경우 아동의 입양과 동시에 시민권 자동 부여)
- 국내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는 아동을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보낸 이후, 미국 입양 가정에서의 적응 및 시민권 취득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시스템을 작동X
- 미국 입양부모의 무관심,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의 無관리 및 無개입 결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약 1만 5천명 이상의 시민권 취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태 (2015. 10. 8.자 국회의원 남인순 보도자료 중)

● 사례

- 1979년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 피해와 파양 피해를 입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 2016년에 범죄 연루를 이유로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례
- 여덟 살에 미국으로 입양 돼 29년간 생활하다가 2011년 한국으로 추방, 불안정한 생활 끝에 2017년 자살한 사례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4) 수령국의 시민권 미취득 피해

● 2022년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터뷰 내용 중

- “대학 갈 때 내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민번호도 못 받았고요. 내 양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내가 자동으로 시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략) 수년간 머리 아파가면서, 시민권 받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특정 수령국)이든 한국 정부든 양부모가 이해하도록 해야 했던 것 중 하나 같아요.” (128쪽)
- “아무도 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한 두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시민권이 있을 텐데. 그런 영향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어요. (중략) 양부모네서 열 두 살에 쫓겨나고 그 이후로는 길거리 신세였어요.” (128쪽)
- “영구적인 주소 없이 지낸 지 15년 정도 됐어요. 주소 없이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도 살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니깐. 실제로는 그냥 떠다녀요. 이렇게 살아서 자유롭기도 하지만 트라우마도 있어요.” (128쪽)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5)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대리입양제도 운영

● 내용

- 대리입양이란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양 방식
-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하게 입양 추진 가능
- 1950년대 한국과 미국간 해외입양을 주도한 해리 홀트에 의해 주창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에 근거 규정 도입(제6조)
- 1976년 입양특례법은 해외입양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만으로 입양 가능하도록 간소화(제9조)

● 문제점

- 양부모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수령국에 일임하고 양부모가 입양 전에 아동과 대면하고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입양 성립 이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 내포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6) 입양을 통한 재정적 이득 추구

- 내용

- 입양기관의 이윤 추구: 수수료 과다 책정, 수수료 이외 별도 후원금 수익
- 입양대상 아동 인테이크를 위한 과당 경쟁, 아동 인수를 위한 대가 지급

✓ 1988. 10. 25. 입양사업제도 개선 기관장 회의자료 中 국회의원 지적 사항

- 국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 실적 저조
- 국외입양비가 국내입양비보다 월등히 많이 받기 때문에 국외입양에 치중하고 있음
- 입양대상 아동 인수시 병의원, 조산소, 동사무소 등에 사례금 또는 분만비 등을 지급하여 사회복지기관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인신매매기관으로 전락
- 입양알선기관에서 수익금 발생시 저소득층의 장학금, 심장병치료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협찬 등 사회복지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막대한 부동산 취득에만 전념하고 있고 엄청난 판공비로 낭비

情報事項報告

- 提供處 : 青瓦臺
- 題目 : 國外入養事業 再檢討 要望
- 內容

- 4대 入養機關의 兒童入養時 問題點

- 養父母로부터 兒童1인당 國外入養費 1,450\$ 과 往復 航空料를 받고 있으며
- 養育費外에 3,000 - 4,000\$ 의 轉旋費를 追加로 받고 있음
- 養父母에게 兒童 引渡時 內國人的 海外 旅行편에 代理 引率 시키는 方法으로 片道 旅費 着服등 營利 追求에 置重
- 入養對象兒童을 確保키 위해 病院, 洞事務所등 中間 轉旋機關에 謝禮金 名目으로 金品을 支給하는등 不條理的 濫床이 되고 있음

- 國外 入養事業의 再檢討 要望

- 國公立 兒童福祉施設의 收容能力 擴大등으로 國外入養의 問題點 改善
- 國內의 孤兒入養에 대한 認識轉換의 雰囲気 助成
- 性倫理教育 強化로 未婚母 發生 抑制등 政府次元의 對策이 要望된다는 來論임

<국가기록원 소장·입양사업지침(1978-198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자료
중 225-230쪽>

- 청와대로 정보사항을 보고한 문서
- 4대 입양기관의 아동입양시 문제점
 - 양부모로부터 아동1인당 국외입양비 1,450\$과 왕복 항공료를 받고 있으며
 - 양육비외에 3,000~4,000\$의 알선비를 추가로 받고 있음
 - 양부모에게 아동 인도시 내국인의 해외 여행편에 대리 인솔시키는 방법으로 편도 여비 착복 등 영리 추구에 치중
 - 입양대상아동을 확보키 위해 병원, 동사무소 등 중간 알선기관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 해외입양인의 피해

- “다 백인인 동네에서 자라고, 다른 동양인은 볼 수 없고, 언제나 내가 못생겼다고 느끼게 돼요. 항상 나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고.” (129쪽)
- “내가 더 나은 삶을 누렸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죠. 중산층 가족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줬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친생가족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은 내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중략) 끊임없이 느끼는 무소속감, 불안감이 있고요, (중략) 어디 안착한 곳 없이 뒹뒹 떠다니는 느낌 “(130쪽)
- “내 목숨을 끊으려고 두 번 시도했어요 “(131쪽)
- “자기자신을 침묵 속에 가둬요. 그러다가 분노로 폭발하죠. 몸을 어디엔가 가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긴장하고요. 감정과 같이 사는 법을 안 배운 것처럼. 압박밥술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년쯤 전에 자살을 가끔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131쪽)
- “끔찍해요. 상처를 지니고 사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소리 내어 우는 해외입양인) (중략) 한국 정부에서 동양 아이를 백인 가정에 보내면서 어디에 애들을 보낸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고, 백인 세상에서 그 아이가 영향 받지 않을 거로 생각 했단 말인가요 “(132쪽)

3. 해외입양과 인권침해

● 침해된 인권

- 입양기록의 조작으로 출생등록될 권리, 정체성을 알 권리,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등 침해
- 입양가정에서 학대 및 파양 피해로 폭력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권리 등 침해
- 시민권 취득을 위한 미조치 및 미개입으로 인한 국적취득권의 침해, 강제추방으로 인한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 대리입양제도의 운영 및 입양기관의 재정적 이익 취득 규제 실패의 결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국가의 아동보호의무 등 위배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위반

-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등 위반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등 위반

4. 불법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공개

- 해외입양 사례 중 아동학대 피해, 허위 고아호적 창설, 입양아동의 신분변경, 입양기록의 조작, 친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 사후관리 부재 등 피해 사례 확인
 - 덴마크 한국인 진실규명 그룹(DKRG) 등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 조사 신청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22. 12. 8. 해외입양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실태조사와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해외입양인 전수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점에서 한계
- ⇒ 전수조사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조사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의 신청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조사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여 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하여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

4. 불법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공개

- 조사의 대상과 범위

- 해외입양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을 담당하였던 4대 해외입양기관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할 것
- 입양 전 친생가족의 상황, 입양절차 상 입양 동의 의사의 확인, 양부모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 입양 성립 후 사후관리까지 입양절차 뿐만 아니라 입양 전후 상황에 대한 조사로 확대
- 그 과정에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조사: 정부는 4대 입양기관장들과 정기적인 회의 개최, 해외입양관련 지침을 시달, 당시 입양 법령상 4대 해외입양기관을 관리 감독할 의무 부담

- 조사결과의 공개

-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에서부터 해외입양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 시작

4. 불법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국가의 책임 인정을 포함하는 공식 사과 및 피해배상

- 철저히 규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는 과거 해외입양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 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조치, 만족, 재발 방지 보증 " 제시
 -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정신적 고통, (e)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의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상

4. 불법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 2022년 해외입양인권실태조사 결과

- 양적 조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4명 중 3명은 한국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응답,
- 10명 중 9명 이상이 입양정보찾기에 대한 지원,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 가족 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해외입양인이 입양가정에서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피해, 신분권 미취득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 당한 피해, 입양기록의 조작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

-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친생가족의 재회와 재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으로 인권침해를 입은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지원

4. 불법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입양기록의 공적 관리와 뿌리 찾기의 지원

- 해외입양인에게 정체성을 알 권리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알 권리 및 정체성을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당함
 - 해외입양인은 현재에도 본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당하고 있음
 - 최근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칠레 정부는 해외입양인이 정체성을 찾고 친생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입양자료와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족찾기에 드는 비용과 가족찾기 과정을 지원
- ⇒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양육시설로부터 이관 받아 보관할 것
- ⇒ 유전자검사 지원,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뿌리찾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

4. 불법해외입양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불법적인 해외입양의 중단

- 2022년 해외입양인권실태조사 결과

- 양적조사에 참가한 해외입양인 95%는 해외입양 이전에 원가족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변,
- 85%는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

- 2019년 네덜란드 조사위원회는 해외입양 절차상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해외입양의 중단 선언을 권고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이 발견된 이상 더 이상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 선언 필요

5. 제도개선 과제

(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입양절차의 공공성 강화

-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 2021년 6월 친생부모의 상담의 지방자치단체 진행 but 그 밖의 입양절차(예비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입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사후관리 등)는 여전히 민간 입양 기관에 일임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권한 있는 공적 당국이 입양을 관장하도록 규정

⇒ 예비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국제입양법을 제정할 것

5. 제도개선 과제

(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의 일원화

- 아동입양을 관장하는 법은 현재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2012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 부존재(입양특례법에는 근거규정 존재)
- 입양기관 개입 여부에 따라 아동의 입양절차가 민법 아니면 입양특례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실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함

⇒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가 통일적으로 아동이익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개정 필요

5. 제도개선 과제

(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제4조), 국가간 불법입양에 관한 유엔공동성명서는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것 명시
 - 현행 입양특례법(제13조 제4항)은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할 때에만 아동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위한 원칙 규정 부존재
- ⇒ 입양절차에 있어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의 피청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입양절차 관여자에게 구체적인 교육과 매뉴얼 제공

5. 제도개선 과제

(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입양절차 관여자의 전문성 확보

- 2022년 해외입양인권실태조사결과 과거 해외입양 관여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드러남
 -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가정 지원을 위한 노력 부재, 형제자매를 분리하여 해외입양 보낸 사례,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외입양보내기 위하여 입양서류를 조작한 사례 등
 - 해외입양절차가 아동이익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모든 종사자가 입양의 원칙을 숙지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양실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
- ⇒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 입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가 입양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슈퍼비전 제공

5. 제도개선 과제

(2)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뿌리찾기 지원

● 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중략)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조항 존재하나, 이를 통한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 찾기와 상봉사례는 5.8%에 불과
- 2022년 해외입양인권실태조사 양적 연구 참가자 중 80.7%가 가족찾기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변함
-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부실한 입양기록으로 가족찾기 실패, 가족찾기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 등
- 2022년 해외입양인권실태조사의 양적 조사에 참가한 해외입양인 95% 이상의 요구사항

5. 제도개선 과제

(2)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뿌리찾기 지원

● 개선방향

-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입양특례법 개정
- 입양인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가족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확대
- 입양기록의 훼손, 분실, 조작 등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입양인의 가족찾기와 정체성을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 사이 단절되었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전문통역 지원 서비스 필요
-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양육시설로부터 이관 받아 공적 보관
- 유전자검사 지원,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뿌리찾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

5. 제도개선 과제

(3) 원가정보보호의 원칙 실현

●배경

- 2022년 해외입양인권실태조사에서 입양의 원인에 대하여 친생부모를 인터뷰 한 결과
 - 경제적 어려움,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부재, 자녀 돌봄과 가족 부양 병행의 어려움, 원가족 지원의 부재 등이 문제됨
 -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나 친지로부터 해외입양을 권유 받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채 해외입양을 결정
- 1980년대 이후 해외입양아동 대다수가 미혼모 가정 출신이었고 2021년에는 99.5%를 차지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

5. 제도개선 과제

(3) 원가정보보호의 원칙 실현

●개선방향

-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생부모가 빈곤을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한 가정의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책정
- 혼인 외 자녀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여 혼인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제도개선 과제

(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

●배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해외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 5. 29.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 5. 1. 발효된 다자간 협약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에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 비준은 마치지 못함

● 개선방향

- 조속히 국내 이행입법을 마련하고 헤이그협약 국회 비준 처리
- 헤이그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재 국회 발의되어 있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입양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참고자료

- 김재민,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김진석, (2017),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 개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노혜련, 김재민, 소라미, 신필식, 이태인, 한분영, (2022), 202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본문 인터뷰의 출처로 기재된 '해외입양인 인권실태조사'
- 뿌리의 집, (2021),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국가인권위원회
- 소라미, (2018), 한국에서 입양제도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32권 제3호.
- 신필식, (2020).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경은(2017),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트렌카), (2019),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 봄
- 조가은, (2019),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